

도의회, 하반기 첫 의정활동 돌입

임시회 개최... 본회의서 청렴실천결의문 채택 27일까지 올 하반기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16일 제 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1대 도의회 하반기는 개원식 없이 의정활동에 돌입했으며, 이날 공청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의장은 이날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원사를 통해

"전라북도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북발전을 견인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염중한 시선을 잘 알고 있다"며 "의회에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다해 도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상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반영하는 전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는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개원식을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절감해 의미있는 곳에 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도민들의 신뢰 회복과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의원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품위 유지 △직무 관련 청렴 실천 △지위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과도한 사비금 수수 금지 △의정활동시 회피 준수 △재산등록·신고의무 성실 이행 △직무상 국외활동 성실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이한기(진안) 조동용(군산) 김정수(익산) 김대중(정읍)

이병도(전주) 강용구(남원) 박용근(정수) 의원이 전북도정의 효율적 조직개편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전라선 고속화사업 추진 촉구 및 KTX세종역 신설 반대 결의안 등이 채택됐다. 한편 포괄적 처벌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됐다. 제374회 임시회에서는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하반기 업무 보고 등이 이뤄지며, 오는 27일 폐회한다. /유호상 기자

민식이법 시행 후 과속운전 '여전'

이한기 의원, "과속단속 장비 10% 설치 시기 앞당겨야"



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이 도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66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0개소에 불과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운전과 불법주정차 행위가 만연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지난 5월 첫 스쿨존 사망사고가 전주에서 발생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급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경찰이 단속했지만 사후예방식 대책에 불과해 민식이법이 정착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도에서도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1월 14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160개 학교에 교통안전시설 204대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속도가 턱없이 느려 계획대로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소한의 안전수단인 과속단속 장비와 신호등부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완성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가 1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송지용 도지사과 김승환 교육감, 도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20일 동안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건수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각각 5,583건, 882건으로 나타나 법 시행이후 여전히

김희수 의원 "교육청 매뉴얼 체계적 시스템 부재"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학교등교 여부결정에 대한 전북도교육청 매뉴얼의 체계적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교육위) 의원은 "군산교육지원청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등교 혼선을 야기시킨 사안에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갖춰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최근 군산지역에서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 휴교결정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함에도 지역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한 전북도의회뿐만 아니라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 전북도교육청 정부부 교육감직을 신설하는 목소리를 냈다. /유호상 기자

임시회 본회의의 5분 발언

"도·교육청, 지방교육 발전 연계 체계 구축을"

강용구 의원



'도교육청-도청 울타리 허물어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가 지방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교육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도가 상호 연계협력해 도내 아이들이 건강하고 도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유지해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 영역으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이 지역과 높은 벽을 쌓아 학교 내에 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도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지방자치 영역에서 엄격히 분리됐기 때문에 지방교육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자주 생략되거나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강용구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교육이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협력체계 구축에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고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결합해 도내 아이들이 학생뿐만이 아닌 '도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밀화 현상 해소, 학교 증축이 답"

조동용 의원



조동용 의원(군산3)은 16일 5분 발언을 통해 공정과 공평행정으로 소의 없는 교육현장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적정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 이런 학교들의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매우 협소해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동용 의원은 과밀화 현상을 군산시 미장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장초는 2011년 개교 당시 15개 학급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49개 학급으로 327%의 학급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시계획 입안 당시 출발부터 개교 이후 증축과정까지 반복된 영터리 학생수 예측으로 과밀화 현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급식장소를 세곳으로 분산시켜 2시간 이내에 급식을 마치는 급식전행이 펼쳐지고 있으며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등하교시간

분산, 교실 좌석 간격확보와 같은 방역지침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의 상황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어울림 학교 운영 등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과,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도서벽지 학교 등에 노력은 많이 했으나 상대적으로 과밀학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공정과 공평을 제1의 교육가치로 삼고 있는 교육청이 과밀학교를 방지하는 것은 역소외이고 공정한 교육공공체 구현이라는 교육철학에 위배된다는 것이 조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학교를 증축해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 확보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교육정책, 기회로 삼고 도약을"

김정수 의원



"정신없이 앞만 보고 교육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는 모래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기둥을 세우고 벽돌 등으로 형태를 만들고 외벽을 마감하거나 색칠을 해야 세월이 지나도 그 기능과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김정수(익산2·교육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 관, 학이 함께 어울려 교육현장의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전북교육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맞이했고, 이는 도민들에게 '전북교육이 바로 미래교육'이라는 희망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두고 깊은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수 의원은 2년 남은 김승환 교육감의 임기동안 발자취를 뒤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정책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도와 도의회의와 교육협력, 교육연계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며 지방교육자치의 길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이 이뤄지는 도내 모든 곳에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교육정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도내의 우수한 인재들을 위하여 탕평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부족한 자원과 작은 땅덩어리, 여전히 강대국의 틀바구니 속에서 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도내 아이들이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학습안전망 구축 등의 교육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비대해진 전북도정, 다이어트 필요"

김대중 의원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 2)이 16일 5분 발언을 통해 과비용저효율의 전라북도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4년 7월 송하진 도지사 취임 후 총 10회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4급 19과, 출연기관 3곳을 신설하는 등 매년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조직운영비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도 인구는 3.3% 감소했지만 도청공무원수는 15.2% 증가해 조직 확대가 진정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매해 사무량 조사 등을 통해 조직진단을 시행하

고 이를 통해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조직도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며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의 결과가 성과 창출로 연결되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의와 소통부족 역시 지적했다.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의와 충분한 설명을 주문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보안등을 이유로 매년 이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사서 봉사활동, 효과 없이 부담만"

이병도 의원



이병도 의원(전주3)이 5분 발언을 통해 학교도서관에서의 학부모 사서 봉사활동이 효과 없이 학부모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도내 법정 사서교사 수효는 총 773명이다. 하지만 실제 배치율은 10.6%인 82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서교사의 법정 기준 미달은 학부모 사서봉사 활동으로 메워지고 있다. 이병도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사서봉사활동이 시행되는 학교는 총 196개 학교이다. 문제는 봉사활동 주기와 시간이 보통 일주일 이하로 하루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보니 봉사활동이 단순 도서대출 및 반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취지는 자원봉사지만 자원해서 나서는 학부모가 드물다는 점, 심지어는 순번제로 봉사활동을 강요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학부모 봉사활동의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기차 생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해야"

박용근 의원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수군)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인 명신의 전기차 생산이 좌초위기에 있다며 근거없는 낙관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해 냉철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명신과 전기차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중국 바이트론가 최근 자금난으로 가동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신에서 내년 4월부터 전기차를 양산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불과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명신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

가 없다고 보고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제대로 된 상황과와도 없이 보고한 것이고 중국 바이트론가 2조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망하게 들리겠다는 낙관적 답변만 하고 있다"며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명신과 중국 바이트론 간에 정식 계약이 아닌 MOU만 체결되었다면 바이트론의 자금난과 명신의 위탁생산은 언제 어떻게 취소될지 모르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